

2023. 6. 19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

주거정비과장	임인구	2133-7190
주거정비지원팀장	이재훈	2133-7198
담 당 자	윤지원	2133-7200
	이용규	2133-7235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서울시,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'수시선정'... 사업 속도 끌어올린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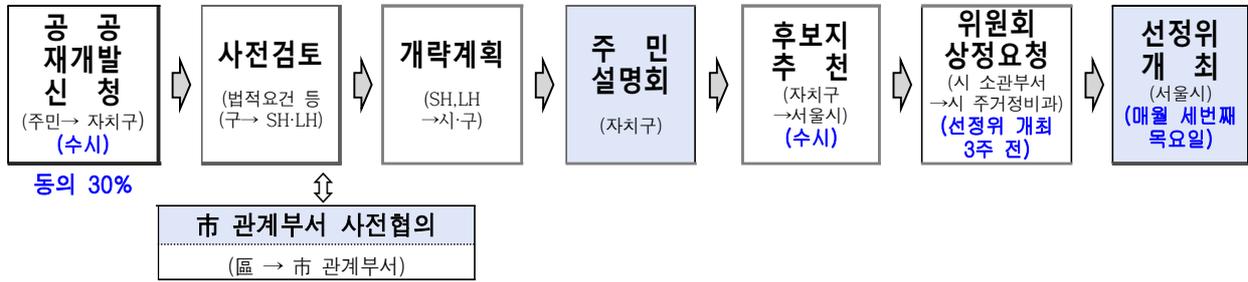
- 연 1회 공모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, 이달부터 수시신청 접수 후 수시선정
- 30% 이상 동의율 확보, 자치구 검토 후 서울시로 추천... 시, 매달 선정위 개최
- 공공재개발, '21년부터 국토부 협력해 후보지 32곳 선정... 정비구역 지정 진행 중
- 시 "노후 주거환경 개선위한 공공재개발, 원하는 지역에 실효성 있게 신속 추진"

-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·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'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'도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.
-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,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'수시신청 및 선정'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.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,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,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.

-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채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·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,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. 서울시는 '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하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.

-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(3.4만 호)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'주민 편의'와 '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'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.
 -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도 「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」을 내놓으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력을 높이고,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-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%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·개략계획(LH/SH)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,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.
 - 주민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여(30% 이상 동의를 확보) 신청한 지역 자치구는 SH 또는 LH공사와 '주민설명회'를 개최, 주민에게 개략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추진의지와 실효성 있는 곳을 후보지 추천(구→시)하면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결정한다.
 - 이와 함께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.



〈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절차〉

-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(신청서, 동의서(자치구 번호부여) 등)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, '정비사업 정보몽땅(자료실)' 또는 '서울시 홈페이지(고시·공고)'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'23년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'권리산정기준일('22.1.28.)'을 유지한다. 다만, '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'후보지 추천일'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청장이 '후보지 추천일'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.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"이라며 "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